

최근 K-방산 수출금융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

| 요약 |

- 폴란드 새 정부는 한국과의 대규모 무기계약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발표(2023. 12. 10)
 - 아울러, 작년 12월 27일 투스크 신임 폴란드 총리는 한국과 체결한 무기계약에서 제공받기로 한 융자금(loan)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 결론적으로, 폴란드는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재검토할 것이나, 향후 변경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
- 한-폴란드 간 무기계약 철회 시, 정부의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 목표 달성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폴란드와는 최근 2년간 K-2 전차 등 4종(150억 달러)에 대한 1, 2차 이행계약을 체결
 - 미체결 물량은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등 3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
 - 계약 철회 시, 유럽 방산수출 교두보 확보 및 포스트 폴란드(Post Poland) 방산수출 확대 등에 어려움 우려
- 이에 따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수출입은행법(이하 수은법)'의 신속한 개정이 시급
 - ① 수출입은행법 신속 개정) 폴란드 2차 이행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 상향(현 15조 원 → 향후 35조 원 이상)을 위한 수은법의 신속한 개정이 시급
 - ② 시중은행 참여 유인) 아울러, 시중은행과의 신디케이트론 추가 확보 및 금리차 보전을 위한 정부지원과 폴란드 국채 매입도 고려할 필요
- 중장기적으로 K-방산 수출금융지원제도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골드러시 시대」 선점해야
 - ① 차별화된 수출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방산, 원자력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해 OECD 국가 신용등급 가이드라인과는 차별화된 수출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 ② 수출금융창구 단일화 및 윈스톱서비스 시스템 구축) 대통령실 중심으로 방산수출금융 의사결정 및 지원창구 단일화를 위한 '방산수출금융지원 협의체(가칭)' 신설 검토
 - ③ 방산수출금융조직 마련)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공적수출신용기관(ECA) 내 선진국 수준의 방산수출금융조직 신설 또는 확대
 - ④ 한국형 FMF 제도 도입) 중장기적으로 K-방산의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 노력과 병행, 선진국 수준의 '한국형 방산수출 차관(K-FMF)(가칭) 제도' 도입 검토

▣ 폴란드 새 정부는 우리나라와의 대규모 무기계약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발표

- 폴란드 호워브니아 하원의장은 작년 총선(2023. 10. 15) 이후 서명한 모든 계약은 무효이며, 한국과의 무기계약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발표(2023. 12. 10)
 - 친EU(유럽연합) 성향의 투스크 신임 총리는 이틀 뒤 ‘부패가 연루된 경우를 제외한 이전 정부의 무기 도입 계약을 존중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부 진화
 - 그러나 12월 27일 신임 총리는 한국과의 무기계약에서 제공받기로 한 용자금(loan)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향후 계약 변경이 없길 희망한다고 밝힘.
 - 2023년 폴란드 국방예산은 약 28조 원 수준이며 이 중 40%(11조 원)가 미국, 한국 등과의 해외 무기 구입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
- 이 같은 폴란드 신임 총리의 발언은 군 현대화를 지속 추진하되, 이전 정부와의 무기 계약은 일부 재검토를 통해 변경 또는 철회도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
 - 친EU 성향의 폴란드 새 정부 정책기조상 향후 독일, 이탈리아 등 기존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주요국과의 방산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
- 특히, 한국과의 대형 무기계약 체결로 인한 기존 나토 주요 무기수출국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평가
 - 아울러, 한국과의 향후 잔여 무기계약(최대 300억 달러 이상)에 대해 저리용자 등 보다 유리한 수출금융조건 확보 등 협상 우선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상당히 내포된 것으로 분석

<표 1> 폴란드 새 정부의 K-방산 무기계약 관련 주요 발표내용 종합

일자	주요 내용
2023. 10. 15	- 폴란드 총선 결과, 정권 교체(법과정의당(PiS) → 시민연합(KO))
2023. 12. 9	- (코시니아크-카미시 차기 국방장관) 전(前) 정부(PiS)가 총선 이후 체결한 계약들은 추후 분석 및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
2023. 12. 10	- (호워브니아 하원의장) 전 정부(PiS)가 총선 이후 서명한 합의는 무효화될 수 있다고 언급
2023. 12. 12	- (투스크 총리) 부패가 연루된 경우를 제외한다면 전 정부가 체결한 모든 무기 도입 계약을 존중하겠다고 발표
2023. 12. 27	- (투스크 총리) 한국 무기 구매의 상당 부분을 용자금으로 조달하기로 했으나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 - 이와 관련하여 한국과의 기존 무기계약을 검토하는 한편, 향후 변경이 없길 바란다는 입장
2024. 1. 4	- (대통령실) 국내외 기업들과의 무기계약은 폴란드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 체결된 것이며, 현 무기 정책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

자료: 관련 보도자료를 종합하여 산업연구원(KIET) 작성.

▣ 「글로벌 방산 골드러시」 시대 선점을 위한 선진국들의 수출금융지원 강화 추세

-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 선진국들은 방산수출에 특화된 금융지원 체계를 운영
 - [미국] 해외군사재정지원(Foreign Military Financing) 제도를 통해 원조 또는 차관 형식으로 구매국 수출금융 요구 지원

- 특히 원조(grant)는 무기 구매국이 갚지 않아도 되는 ‘Non-Repayable’ 방식
 - * 미국의 이집트 원조는 연 10억 달러, 필리핀, 콜롬비아, 베트남 등은 연 500만~1억 달러 수준
- [프랑스] 방산 등 국가전략산업에 OECD 신용등급과는 별도의 무기수출금융 지원
- 프랑스 공적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인 ‘Bpifrance’ 및 일반은행(BNP Paribas 등)은 OECD 기준 최하 7등급 국가(62개국)들도 ‘조건부 승인’ 형태로 지원¹⁾
- [스웨덴] 수출금융기관(SEK)과 정부 수출보증위원회(EKN)에서 방산수출 금융 지원
- 2015년 브라질 정부에 47억 달러 금융지원을 통해 그리펜(Gripen) 전투기(36대) 수출 성공
- [러시아·중국] 구매국이 요구하는 초장기(30~50년), 초저리 금융지원(국채 금리 이하)으로 필리핀(다련장 로켓 등), 태국(잠수함) 등에서 대형 무기사업 수주에 성공

〈표 2〉 주요 선진국의 방산수출금융지원 체계

	금융지원 체계	주요 내용
미국	해외군사재정지원(FMF) 제도	- 원조 또는 차관 형식으로 수출 금융을 지원
프랑스	OECD 가이드라인 외 방산수출에 대한 자체 신용등급 제도	- 방산, 항공 등 국가 전략산업에 한해 OECD 가이드라인과는 차별화된 신용등급 적용 - 프랑스 ECA 및 일반은행 내 방산수출금융조직 운영
스웨덴	공적수출신용기관(ECA) 활용	- 수출금융기관(SEK), 정부 수출보증위원회(EKN)에서 금융지원
러시아·중국	초장기(30~50년), 초저리(1% 미만) 금융지원	- 무기 구매국의 요구에 부합하는 금융지원 조건으로 대형무기사업 수주에 유리

자료: 산업연구원(KIET) 작성.

- 최근 선진국의 방산수출금융지원은 대규모화, 패키지화로 강화되는 추세
 - [프랑스] 이집트에 대한 라팔 전투기 수출 시 2015년에 계약금액(59억 달러)의 50%, 2021년에 계약금액(47억 달러)의 85% 대출을 통해 대규모의 금융지원 제공
 - [이탈리아] 2020년 이집트에 호위함 등 다수 무기를 수출하는 조건으로 133억 달러 계약 체결, 60억 달러 대규모 수출금융 지원

〈표 3〉 선진국들의 대이집트 방산수출금융지원 사례

계약 연도	수출국	수출 품목	계약 금액	금융지원 내용
2015	프랑스	라팔 전투기	59억 달러	- 계약금액 50%를 COFACE에서 대출
2021	프랑스	라팔 전투기	47억 달러	- 계약금의 85%를 Bpifrance에서 대출
2020	이탈리아	호위함 등 다수 무기	133억 달러	- 약 60억 달러를 SACE에서 금융지원

자료: 산업연구원(2021), 「글로벌 방산수출 구조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1) 산업연구원(2018), 프랑스 Bpifrance 해외출장 인터뷰 결과 등을 기초로 재작성.

■ **K-방산은 지난 10여 년간 선진국의 적극적인 수출금융지원에 밀려 수차례 수주 실패**

- K-방산은 2010년대 초반부터 글로벌 방산시장에 본격 진출하였으나,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기존 방산수출 강국들의 적극적인 수출금융지원 등에 밀려 수주 실패
 - [중국] 2017년 태국 잠수함 사업과 말레이시아 다련장 로켓 사업 등에서 중국의 막대한 장기 저리 용자(30~50년) 지원과 저가 공세로 K-방산 수주 실패
 - [프랑스] 2020년 필리핀 잠수함 사업에서 필리핀의 국가신용등급(3등급) 기준금리 대비 초저리(1% 미만)의 금융지원 제안

〈표 4〉 최근 K-방산 수출 주요 실패 사례 및 경쟁국들의 방산수출금융지원 제안 내용

연도	구매국	무기체계	경쟁국	금융지원 제안 내용
2017	태국	잠수함	중국(S26T)	중국의 장기 저리 금융(30년) 지원
2017	말레이시아	다련장 로켓	중국(AR-3)	중국의 초장기 차관 지원(50년)
2020	필리핀	잠수함	프랑스(Scorpene)	프랑스의 초저리(1% 미만) 금리 제안

자료: 주간동아(2017) 등 보도자료 종합.

■ **향후 폴란드와의 무기계약이 철회될 경우, 정부의 2027년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 목표 달성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최근 2년간(2022~2023) 폴란드 무기수출은 K-방산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50.2%)을 차지
 - 2022년 방산수출 173억 달러(수주 기준) 중 폴란드가 124억 달러로 72% 차지, 2023년에도 전체 130억 달러 중 25억 달러 상당으로 약 21% 차지
 - 2024년 폴란드와의 무기계약 잔여분은 300억 달러 이상으로 정부 목표치(200억 달러)를 크게 상회할 전망
 - K-2 전차(820대, 150억~200억 달러), K-9 자주포(308문, 50억~60억 달러), 천무(70여 문 및 탄약, 50억~60억 달러) 등 2차 이행계약 금액은 250억~320억 달러 추정
 - 폴란드와의 무기계약이 철회되면, 정부의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할 전망
 - ① 동·북유럽 국가 방산수출 차질 가능성) 폴란드 인접국인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등 주요 무기구매국들의 한국 무기구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될 가능성
 - ② 유럽 방산수출 교두보 확보 애로) 폴란드를 교두보로 유럽에 본격 진출하려는 K-방산 수출 전략이 상당히 지체될 가능성
 - ③ 포스트 폴란드(Post Poland) 방산수출 확대 어려움) 폴란드와의 대형 무기계약을 기반으로 중동, 북미, 아시아·태평양 등 전면적인 방산수출 확대 전략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
- * 미국(T-50 훈련기, 100억~300억 달러), 캐나다(잠수함, 450억 달러+) 등

- (④ 한반도 유사시 국제방산협력 애로) 폴란드와의 대형 무기계약을 통해 향후 우방국들과 한반도 유사시 동일 무기체계 및 탄약, 미사일 지원 등의 긴밀한 국제방산협력 체결 추진에도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가능성
- (⑤ K-방산기업 전체에 악영향 초래) 폴란드 무기계약과 관련된 수백여 개 기업을 포함한 K-방산기업 전체에 커다란 악영향을 초래할 전망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2년 폴란드와 체결한 기본계약 등에 따라 2023년 상반기부터 창원 3사업장의 생산라인 증설, 추가 인력 채용, 폴란드 현지법인 설립 등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계약 조정 또는 파기 시 상당한 파장 불가피
 - * (현대로템) 최근 2년간 대규모 인력 채용과 현지생산을 검토해 왔다는 점에서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2차 이행계약(820대) 성패에 회사의 명운이 걸려 있는 실정
- 2024년 1월 4일 폴란드 대통령실의 ‘한국 방산계약 지지와 현 정책 유지’ 발표는 긍정적이거나, 신(총리)-구(대통령) 정권의 대립 심화 시 K-방산에 대한 최악의 경우 발생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
 - (대통령실(구 정부)) 현재의 무기정책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2024. 1. 4)
 - (신임 총리(신정부)) 폴란드 신임 총리는 한국과의 무기계약에서 제공받기로 한 융자금(loan)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향후 계약 변경이 없길 희망(2023. 12. 27)
- 신임 국방장관도 작년 총선 이후 서명한 거래는 우리의 분석, 평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

▣ (단기) 수은법(수출입은행법) 개정을 통한 폴란드 2차 이행계약 체결 시급

- 방산수출의 정부 간 계약(GtoG) 및 잠금효과(Lock-In) 특성상, 초기 이윤이 적더라도 무기수출 이후 30~50년간 수리, 정비, 성능개량을 통한 애프터마켓 확보를 위한 시장 진입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선진국 수준의 적극적인 수출금융 지원 필요
- (① 수출입은행법 신속 개정) 2024년도 폴란드 2차 이행계약의 원만한 체결과 포스트 폴란드 시장으로의 적극 진출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수은법(수출입은행법) 개정을 통한 2차 이행계약 체결이 시급
 - 폴란드는 2023년 국방예산을 GDP의 4%까지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군 현대화 수요와 미국, 이스라엘에서의 무기 대량 구매 등과 맞물려 한국 측에 금융지원을 요청
 - 대규모 폴란드 무기수출금융지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는 이해되나, 단기간 내 폴란드의 디폴트 선언 가능성이 매우 미미하고, 통상적으로 이를 무기 구매국이 판매국에 요구하는 일종의 무기거래 관행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²⁾

2) KIET-SIPRI 화상회의 결과(2023. 9. 12).

-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 상향(현 15조 원→향후 35조 원 이상)을 통한 폴란드 2차 이행계약의 조기 체결 및 해외 대형 수주사업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
 - 2024년 초 임시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가 시급한 상황
- (② 시중은행 참여 유인) 이와 함께, 시중은행과의 신디케이트론 추가 확보 및 금리차 보전을 위한 정부 지원과 폴란드 국채 매입도 병행 고려 필요
 - 시중은행은 방위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관심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민간은행들이 지속적으로 방산수출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도 고려할 필요
 - 특히 시중은행은 공적수출신용기관(ECA, Export Credit Agency) 수준의 저금리 조달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금리차 보전 방안, ECA와 시중은행 간 공동 지원, 선진국 수준의 위험관리 및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

▣ (중장기) 방산수출금융의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골드러시」 시대 선점 필요

- 2024년 1월 현재 K-방산은 30여 개국에 1,200억 달러 이상 무기수출을 추진 중
 - 미국(T-50 훈련기: 100억~300억 달러), 캐나다(잠수함: 450억 달러+),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유도무기, KF-21, 방공무기 등: 100억~300억 달러) 등
- 우리나라 방산수출 추진국가(30개국+) 중 폴란드의 국가신용도는 OECD 신용등급에 포함되지 않은 고소득 국가(High Income OECD Country) 중 하나
 - 폴란드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과 함께 OECD 고소득 국가에 해당되어 미포함

〈표 5〉 우리나라 방산수출 주요국들의 OECD 신용등급 현황

단위: 억 달러

권역명	국가명	수출 유망 품목	수출액(예상)	OECD 신용등급
유럽	폴란드	K-2 전차(820대), K-9 자주포(308문), 천무(70여 문) 등	250~320	미포함(고소득 국가)
	영국	K-9 자주포(영국 AS 90 자주포 교체사업)	8	상동
	루마니아	K-2 전차, K-9 자주포, 천공-II 등	52+	3
	라트비아	K-21 장갑차	N/A	미포함(고소득 국가)
	슬로바키아	FA-50 경공격기	N/A	상동
북미	미국	T-50 훈련기, 함정 MRO 등	100~300+	상동
	캐나다	재래식 잠수함	450+	상동
아시아·CIS	인도네시아	KT-1, 잠수함, KFX 공동개발 등	N/A	3
	인도	K-9 자주포, 소해함, 군수지원함 등	N/A	3
	베트남	수리온, K-2 전차 등	N/A	4
	우즈베키스탄	FA-50 경공격기 등	N/A	5
	투르크메니스탄	KT-1 훈련기 등	N/A	7
	태국	FA-50, 호위함(2차) 등	N/A	3
	필리핀	잠수함, 건인포, 수송함, 중고장비 등	N/A	3
	미얀마	군수지원함, 중고장비 등	N/A	7
	말레이시아	함정, 기동장비 등	N/A	2

(계속)

권역명	국가명	수출 유망 품목	수출액(예상)	OECD 신용등급
중동	쿠웨이트	FA-50 등	N/A	2
	아랍에미리트	KF-21, 수리온, 유도무기, 성능개량 등	N/A	2
	사우디아라비아	KF-21, 유도무기, 기동장비 등	50~60+	2
아프리카	르완다	KT-1 등	N/A	6
	보츠와나	T-50, K-2 전차 등	N/A	3
	이집트	FA-50 경공격기, K-2 전차, 천궁 II, 대전차미사일 등	40~50+	6
	리비아	경공격기, 호위함, 잠갑차 등	N/A	7
	세네갈	FA-50 등	N/A	5
중남미	파라과이	KT-1 등	N/A	5
	에콰도르	KT-1, 수상함 등	N/A	6
	아르헨티나	FA-50 등	N/A	7
	콜롬비아	FA-50, 탄약플랜트, 수상함 등	10+	4
	페루 등	T-50, 수상함, 209 잠수함 등	N/A	3
계	30+		900~1,200+	

자료: 산업연구원(2016), 「우리나라 주요 수출방산제품에 대한 해외경쟁사의 수출현황·전략 및 대응방안과 시사점 연구」; 산업연구원(2018), 「2018 KJET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및 기업 인터뷰 자료(2023) 등을 종합하여 산업연구원(KJET) 작성.

주: OECD 신용등급은 2023년 10월 13일 기준.

- 반면, 주요 방산수출국 중 이집트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나 중남미 국가 등은 OECD 신용등급이 낮는데다 외환보유고가 부족하여 무기구매 시 판매국에 방산수출금융 등의 반대급부를 적극 요구하는 국가들로 분석
 -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신용등급이 비교적 높은 3등급 이상 국가에 대해서는 경쟁력 있는 금융지원이 가능하나, 6등급 이하의 낮은 신용등급 국가에 대해서는 선진국과는 달리 금융지원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
- 이에 따라, 향후 K-방산 수출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진국 수준의 수출금융제도 고도화를 병행해 나갈 필요
- ① 차별화된 수출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방산, 원자력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과는 별도의 차별화된 수출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

〈표 6〉 OECD 국가리스크 신용등급 구분(2023년 10월 기준)

등급 구분	국가 수	대표 국가
0	1	싱가포르
2	7	아랍에미리트(UAE),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등
3	14	우루과이, 태국, 루마니아, 필리핀, 페루 등
4	11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르비아, 파나마, 콜롬비아 등
5	17	우즈베키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튀르키예, 세네갈 등
6	25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이집트, 에콰도르 등
7	62	아프가니스탄, 잠비아, 예멘,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등
계	137	-

자료: OECD(2023), "Country Risk Classifications of the Participants to the 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2023. 10. 13.

주: 폴란드,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OECD 고소득 국가 또는 고소득 유럽권역 국가로 미포함.

〈표 7〉 우리나라 방산수출금융의 발전과제

	발전 과제	주요 내용
단기	① 수출입은행법 신속 개정	-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 상향(현 15조 원 → 향후 35조 원 이상)
	② 시중은행 참여 유인	- 시중은행을 통한 신디케이트론 추가 또는 폴란드 국채 매입 검토 - 금리차 보전을 위한 정부지원 병행
중장기	① 차별화된 수출금융 지원 시스템 구축	- 미국, 프랑스 등을 벤치마킹하여 국가전략산업에 한해 적용되는 별도의 수출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 구체적으로, 보증 요율 할인 및 리스크 프리미엄 우대, 장기 상환기간 보장, 파이낸싱 한도의 유연성 강화 등 추진
	② 수출금융창구 단일화 및 원스톱서비스 시스템 구축	-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지원을 위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방산수출금융지원 협의체(가칭)' 신설 검토
	③ 방산수출금융조직 마련	- ECA 내 선진국 수준의 방산수출금융조직 신설 또는 확대 - 필요시 주요 민간은행에도 관련 조직 마련 검토
	④ K-FMF(가칭) 제도 도입	- K-방산의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 노력과 병행하여 선진국 수준의 '한국형 방산수출 차관(K-Foreign Military Financing) 제도(가칭)' 도입 검토

- 미국, 프랑스 등을 벤치마킹, 방산수출에 특화된 맞춤형 수출금융지원 시스템 마련
- 중장기적으로 방산수출금융에 대한 보증 요율 할인 및 리스크 프리미엄 우대, 장기 상환기간 보장(30~50년), 파이낸싱 한도의 유연성 강화(계약액의 최대 100%) 등
- 단, 신용등급이 낮은 국가(6~7등급)들의 무차별적 지원보다는 프랑스 사례와 같이 향후 우리나라 자체 국가 신용등급 가이드라인 마련 등 체계적이고 유연한 접근 필요
- (② 수출금융창구 단일화 및 원스톱서비스 시스템 구축)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방산수출금융 의사결정 및 지원창구 단일화를 위한 '방산수출금융지원 협의체(가칭)' 신설 검토
- (③ 방산수출금융조직 마련)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공적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 내 선진국 수준의 방산수출금융조직 신설 또는 확대 필요
 - 필요시 국내 주요 민간은행(국민, 신한 등)에도 프랑스(BNP Paribas, Societe General) 등에 준하는 방산수출금융조직 마련 검토
- (④ K-FMF 제도 도입) K-방산의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 노력과 병행하여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한국형 방산수출 차관(K-Foreign Military Financing)(가칭)' 제도 도입 검토

장원준 기계·방위산업실 | 연구위원 | wjang47@kiet.re.kr | 044-287-3284

김미정 기계·방위산업실 | 전문연구원 | mjkim@kiet.re.kr | 044-287-3257

박혜지 기계·방위산업실 | 연구원 | hjpark@kiet.re.kr | 044-287-3827